

자유교육을 위하여

- 교양교육에 대한 실용성 요구와 대학의 과제

2009. 03. 11. (수) | 이성원(서울대)



대학과 직업교육(vocationalism).

대학은 공공의 목적을 위한 기관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한다. 그러나 그 정의는 대학을 보는 시각의 다른 한 쪽, 즉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동기와는 큰 차이가 있다. 학생들을 대학에 진학하게 유도하는 요인은 개인적 성공의 가능성이다. 학생들은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동시장 혹은 취업 경쟁에서 더 높게 평가받기 위해, 한마디로 사회적 경쟁에서 남보다 앞서기 위해 대학에 오는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각종 형태의 3차 교육기관에 진학하는 학생의 비율이 80%를 훌쩍 넘어서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많은 학생들은 그 밖의 다른 선택이 없다고 믿고 대학에 진학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도 그 나름의 근거가 있다. 노동시장에서 고등학교 졸업장만을 가진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기회와 이들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어느 누구도 불안정한 저임금의 비숙련 노동자로 남고 싶은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대학 진학이 고등학교 졸업 즉시 일자리를 찾는 것보다 현명한 선택이라고 믿고 대학에 진학한다. 말하자면 학생들은 학사학위 취득에 들어가는 기간 및 경제적 부담과 대학 졸업장이 가져다주리라 기대되는 취업 자격을 맞바꾸는 셈이다.

전국적으로 볼 때 대학이,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각종 형태의 3차 교육기관들이, 부응해야 하는 과제는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의 각 부문에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일이다. 절대다수의 학생들이 대학으로부터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업교육에 대한 압도적 요구에 직면하여, 대학은 변화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렇게 변화해 왔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대학에 가져온 변화는 실로 심대하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vocationalism"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의 요구는 과거의 대학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프로그램(가령 호텔경영학, 관광학 등)을 대학에 개설하게 만들었고, 이들 분야는 대학에 개설됨으로써 "학문"으로서의 위상을 획득한다. 학사과정만을 운영하는 미국의 소규모 문리과대학(liberal arts college)들을 보더라도 톱 클래스의 저명한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직업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 변신하였다. 이제는 교육의 "수요자" 또는 "공급자"라는 표현은 더 이상 비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진실로 말을 하게 된 저간의 사정이다. 이제는 학생들이 무엇을 요구하느냐의 문제가 대학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하였듯 학생들의 가장 첨예한 요구는 졸업 후 취업문제이다.

학생들의 "학습권"은 또한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또는 한 대학 내에서라면 특정학과 또는 단과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비롯한다. 대학이 학생들을 "유치"하자니 학생들의 요구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대학 스스로가 학생들의 관심을 끌만한 "매력적인" 각종 새로운 전공과정을 만들어 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도 "대학간의 경쟁"으로 간주되게 되었다.

학생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끼듯, 대학 또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여겨 스스로의 생존전략에 따라 그와 같은 전환을 감행하는 것이다. 그 새로운 프로그램이 지적으로 얼마나 알맹이가 있는 프로그램이냐는 별개의 문제로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과제다. 때로는 명(名)과 실(實)이 서로 같지 않을 경우도 있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관련하여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일까? 모든 것을 그렇게 학생들의 선택에 내맡겨도 되는 것일까? 또 그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선택일까? 학생들을 교육의 “수요자”로 재규정하는 것은 일견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은 대학교육의 의의와 성격을 크게 제한하고 훼손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려해야 할 점은 그것이 학생들을 오히려 “배움”의 과정으로 이끌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의식은 공부하는 행위 자체를 도구로밖에는 설정하지 않기 쉽다. 또 학업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예측가능하고 판에 박힌 모습 이상으로 확장되어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기조차 한다. 또 가르치는 행위도 깔끔하게 포장된 지식의 토막들을 제시하고 구매자들로 하여금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는 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 모름지기 대학의 교육 과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느끼고 깨우치게 만드는 강렬한 교육체험이어야 하고 그것은 자발적 발견의 과정이어야 한다. 그런데 힘들여 공부할 때 비로소 무언가를 깨우치고 발견하게 되는 법인데, 그러기 이전에 학생들이 이미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구태여 애써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선(先)판단을 하고 있다면 어찌되는 것일까?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은 교육의 “수요자”들이 대학교육을 대하는 태도요 학사과정의 직업교육화이다. 물론 이러한 요구 자체는 누구도 문제 삼을 수 없는 정당한 요구이다. 역사적으로도 대학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진화하여 왔으며, 특히 그것은 고등교육의 기회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된 대중교육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더욱 그러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대학은 더욱 더 그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도록 요구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은 어떤 종류의 것이며 진실로 중요한 ‘앎’은 어떤 것일까? 직업교육에 대한 압도적 요구에 직면하여 대학이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의 이념을 떠 나가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가운데 대학 스스로도 대학이란 어떤 종류의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인지, “자유교육”이란 과연 무엇이나, 그 의의는 어디에 있는 것이며 학문의 “실용성”과의 관계는 무엇이나, 등을 반문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물음들에 대하여 아직은 충분하다고 하리만큼의 합의에 도달해 있는 것 같지 않다. 대학은 이 문제에 관한 논의를 보류해둔 채 굴러가고 있는 듯하다.

나는 자유교육의 이념이 근본적으로 시장의 원리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대학은 시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둔 사회제도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만을 단순히 고수한다면, 이는 자칫 자유교육이 처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만을 가중시킬 뿐 시장이 대학을 조건 지은 상황에 적절하게 응답하는 길은 되지 못할 것이다. 대학에 주어진 임무와 고등교육의 이념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장이 대학을 어떻게 조건 지었는가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대학 교육에서 이 두 가지 요구를 양립 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양자를 다 충족시키는 길을 찾는 일이다. 따지고 보면 교양교육이란 이를 위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교육 그리고 그 일환으로 제공되는 교양교육은 학생들의 사고를 지배하는 vocationalism 을 주어진 사실로 전제하고 이루어져야 한다. 또 이러한 경향을 되돌리는 것은 어쩌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고소득 추구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직종에 종사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리라고 믿어지는 분야를 공부해두어야 한다고 믿는다. 대학도 점점 더 학생들의 직업 선택이라는 목표에 맞춰져가고 있다. 이 모든 현실을 외면하고 이루어지는 논의는 쳇바퀴 돌듯 되풀이되는 공허한 논의가 될 것이다.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는 졸업 후 취업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학생들의 현실과 직업교육에 함몰되지 않는 교육의 이념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를 모색하는 일이다. 우리의 논의는 대학교육을 대하는 학생들의 태도, 사고방식, 욕구 등에 관한 솔직한 대면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들의 진로에 대비한 교육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점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이는 다만 무엇을 전제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의미할 뿐이지 대학교와 같은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사과정 교육의

“목표”가 달라졌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믿는다. 교육 환경의 변화 앞에 “무엇을 어떻게 교육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항시적으로 반성·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명제다. 존 듀이(John Dewey)의 말대로 옛 것으로 돌아가기 위해 새로운 것을 외면하는 일은 한마디로 말이 안 되지만, 현실이 그러하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것에만 일로매진하는 태도 또한 무엇이 더 나은 길인가를 추구하는 인간의 열망에 부합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자유교육의 이념과 관련된 지적·교육철학적 전통이 나름대로 굳건히 살아 있는 것은 바로 취업의 압력을 덜 받거나 쉽게 유예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엘리트 교육기관의 경우이다.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 교육기관이 그 예들이 될 수 있다. 이들 교육기관은 명시적으로 직업화된 교육 커리큘럼을 피할 수 있는 (즉 초월할 수 있는) 여유를 누리고 있다. 그 이유는 어쩌면 이러한 엘리트 교육기관들이야말로 취업을 위한 대비에서가 아니라 지식의 창출에서 그 존재 이유를 찾는 연구대학이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사과정의 전반적 직업교육화 추세 속에서도 이들 대학은 전문과정을 대학원과정으로 미룰 수 있는 위치에 있기도 하다. 또한 학사과정을 밟는 학생들의 다수를 구성하는 영역 자체가 이미 전문인 육성 과정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튼 직업교육을 혐소하게 이해할 때 지적 계발·시민적 덕성의 함양이라는 대학이 추구하는 가치는 빈곤해진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로 직업교육 자체도 빈곤화된다. 전문인 양성과정은 “고등교육의 직업교육화 현상”의 대표적 예요 또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실로 얼마나 많은 부분이 자유교육의 요소로 구성되어야 하는가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인간 사회의 어느 현상도 결코 각 분과학문의 시각만으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하기 힘들다. “일반교육” “교양교육” 등과 함께 복합학문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유교육에 대한 진정한 지지는 그것이 전문 능력의 핵심적 구성요소임이 인식되고 따라서 자유교육의 요소가 학생들의 직업적 이해와 합치한다고 여길 때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사실은 자유교육이 뿌리내리기 어려운 현실을 말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럴수록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과정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 자유교육을 강력히 체험해볼 기회를 갖도록 해줄 필요가 있음을 역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유교육의 “효용성”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은 인간이 일구어낸 문화의 다양한 모습을 반추하는 일이며,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져다주고, 우리의 사유를 밝혀준다. 그것은 한 인간을 온전한 전체로 성숙·발달시켜 주므로 교육의 기본 이념으로 설정되어왔으며, 민주사회일수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든 사람들이 받을 가치가 있고 받을 권리가 있는 교육으로 추구되어 왔다. 그것은 대학교육의 요체로서, 역사의 변천에 따라 대학이라는 사회제도의 성격과 기능이 변해간다 하더라도 대학은 끊임없이 이 자유교육의 이상을 환기시킴으로써 그 존재이유를 확보하며 존속해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교육은 그 “효용성”을 “입증”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학교육과 공리주의의 관계에 대하여는 밀(John Stuart Mill)의 경우를 참조해볼 수 있다. 밀은 그의 아버지(James Mill)가 벤담(Jeremy Bentham)의 영향 속에 그에게 부과한, 철저하게 목적지향적인 공리주의적 교육관에 입각한 교육을 받았다. 그랬던 만큼 이에 대한 비판 또한 강렬했다. 그는 대학이 “생계수단을 획득하는 데에 맞추어진 지식”을 교육하는 곳이 아니며 그 목표는 오직 “유능하고 계발된 인간”을 만드는 데에 있다고 말했다. 나는 이러한 정의가 아직도 유효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것이 극소수의 선택된 자만이 대학에 진학했던 19세기적 상황에서만 나올 법한 발언이요, 현 시점에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는 다음 구절까지 인용해야 하겠다. “특정 전문지식을 지성의 한 줄기로 배우는지 혹은 단지 직업으로 배우는지, 또는 일단 그 지식을 습득했을 때 그것을 현명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그들이 어떤 종류의 정신으로 그 일에 임할 수 있느냐, 즉 교육제도 일반이

어떤 종류의 지성과 윤리관을 그들에게서 계발해 내는지에 달려 있다.” 말이 강조한 것은 대학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일반 원리(general principles)”였다. 그것은 “인식 능력” “분별력” “판단력” “비판 능력”등을 의미했다. 19 세기는 바야흐로 학문적 분화 및 전문화가 심화되기 시작한 시대였다. 요즈음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시대적 흐름을 주도한 것은 공리주의였다. 그런 시대를 살면서 밀 자신도 자신의 주장이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치부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의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제 삶에서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고 여론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결국 균형 잡힌, 잘 계발된 지성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현대사회는 19 세기와는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변했다. 변화는 점점 더 가속화되어왔고 사태는 말할 수 없이 복잡해졌으며 전 지구적 상호의존성은 돌이킬 수 없이 심화되었다. 본디 인간 현실이란 어느 경우든 깔끔하게 정리·요약될 수 없는 복잡성 내지는 혼란스러움을 지니게 마련이지만, 현대사회의 복잡화와 더불어 문제 자체가 점점 더 쉽게 정의되기 어려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현상을 통찰하거나 확신을 가지고 결과를 예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정답과도 같은 명쾌한 해결책보다는 복수의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뿐인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각기 다른 가치와 근거를 토대로 하여 그 정당성 주장을 하고 있다. 하나의 선택은 불가피하게 다른 것을 양보하게 만들며, 중요한 문제일수록 우리가 그 전모를 아는지 모르는지도 불분명하다. 주어진 데이터도 부족하고, 단일한 해결이 없기 쉽다. 이것이 이른바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하게 될 현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럴수록 우리는 이 모든 사태를 보다 넓은 지평에서 바라보고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줄 것을 요구받고 있다.

교육이 처한 역설이 여기에 있다. 지식이 점점 더 세분화되어 발전해 나가는 데에 비례하여 이 지식을 종합할 필요성이 점점 더 증대해간다. 지식의 양이 증대될수록 전체를 파악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러나 전체를 바라다볼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야말로 “교육”(encyklios paideia)이 지향해왔던 이상 바로 그것이다. 이는 단순히 지식의 양을 넓히는 것과는 구별되는 문제다. 그래서 요즈음은 교육의 목표를 한마디로 “배워가는 법을 배우는 일(learning how to learn)”이라고 정의하지 않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은 높은 수준의 “사고의 질”이다. 높은 수준의 추론 및 사유능력, 종합능력, 이에 따르는 비판적 시각, 그리고 판단력, 이런 것들이 전문 직종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능력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주어진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서로 다른 제반 요인들을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견줄 수 있게 만드는 교육이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사태의 배면에 “진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지 생각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무엇이 있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의 한계는 무엇인지, 하나의 결정에는 어떤 상충되는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는지, 그래서 어떤 양보와 절충이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할 줄 알게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협소하게 정의된 전문지식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대학교육이 본질적으로 자유교육의 성격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간 사회의 어떤 문제든 윤리적, 법적, 경제적 맥락 등과 떼려야 뗄 수 없이 뒤얽혀 있음이 점점 더 자각되고 있다. 전문영역에 종사할, 그중에서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의 상충부를 구성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맥락”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필수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진대 대학이 자유교육을 하는 곳이라는 점은 학생들에게 그다지 뚜렷이 의식되지 않을지는 몰라도, 대학은 자유교육의 이상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대학이 스스로의 목표를 졸업 후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직업교육에 국한시킨다면 이는 대학의 빈곤화를 자초하는 일이 된다. 그런데도 왜 학생들 간에는 진로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들이 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는 식의 생각이 만연되어 있으며, 왜 사회의 일각에는 자유학문의 과목들로 구성된 “구태의연한” 교과과정을 제공하는 대학은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도 못하고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지도 못한다는 인식이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러한 경향이야말로 우리 사회 도처에서 발견되는 사고의 천박성을 반영하는 것이며, 자유교육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징표라고 생각한다. “대학교육이 사회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든가 “대학에서 전혀 쓸모없는 것만 가르치고 있다”는 비판은 대학이 직업교육을 외면하고 자유교육을 시켜서가 아니라 자유교육을 제대로 못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 꽤 유능해 보이는 대졸자들이 한 분야 이외의 영역은 별로 아는 바가 없고 나아가서 “생각할 줄 모른다”는 비판을 받는다면, 이 또한 자유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효용성”이야말로 여기에 해당한다. 많은 교육 담당자들이

자유교육이 대학교육의 핵심임을 경험적으로 터득하였고 이를 즐기치게 역설해 왔다. 최근 설립되는 교양교육이나 학사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그 영문명칭을 ‘The Faculty of Liberal Education’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모든 전공교육과 전문화된 직업교육은 각 단과대학이 관장하지만, 한 대학교의 학사과정 교육 전반을 통해 구현되어야 하는 자유교육의 정신을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임무임을 그 영문명칭이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이)용할 수 있습니다.